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1
----------	------

발의연월일 : 2024. 8. 28.

발 의 자 : 이인선 · 김성원 · 권영세  
추경호 · 박수민 · 안상훈  
조승환 · 김희정 · 김석기  
박정하 의원 (10인)

## 제안이유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음.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20대 이하가 50%, 10대 이하가 25%고,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10대나 20대인 것으로 밝혀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함에도 현행 규정은 촬영물 등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적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② (현행과 같음)